

전북지사 후보 (송하진, 권태홍)

3대 핵심공약 및 5대 주요 분야 정책평가

【경실련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인길 대전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수진 전주경실련 사무국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자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개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 평가표

후보명	구분	공약명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제1공약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제2공약	전북산하 1000리길 조성
	제3공약	4차 산업혁명 대응 빅3 대표사업 육성
권태홍 (정의당)	제1공약	새만금 신규상으로 전북경제 회생
	제2공약	공공 건강복지 허브 구축
	제3공약	도민주도성장: 14개 시군 균형발전과 마을자치경제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 송하진(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반적으로 개발위주의 공약에 머물러 있고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는 예상되지 않고 환경 보전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음.
- 도지사였었기 때문인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물론 계속 추진하는 것도 중요함)의 단순한 반복이나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내용(탄소산업, 4차 산업혁명 등)들의 조합만으로 여겨질 뿐 공약의 실효성이 의문스러움.
- 예산 마련 및 공약의 세부 진행계획을 확인할 수가 없음.
- 권태홍(정의당) 후보는 지역현안인 새만금 개발과 의료서비스 낙후지역인 전북도의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14개 시군 균형발전과 마을자치경제에 대한 내용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전북도의 시급한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임.
- 전북도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환경보전과 함께 개발을 진행해나가겠다는 의지가 확인되고, 시골 산간벽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공공의료영역을 확대하겠다는 확실한 공약이 확인되며,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전북도내에서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임.
- 하지만, 제시된 공약에는 문제점 지적만 있을 뿐, 대안에 대한 의견이 확인되지 않고 새만금개발과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 달리 예산 세부내역 등도 누락되어 있음.
- 개발에 치우치지 않고 가까이에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으로 판단되나,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세부전략과 추진력만 갖춰진다면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후보별 평가

■ 송하진(더불어민주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물류센터 구축- 기업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장내유용미생물은행 구축 |
|---|

1) 구체성 평가

-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을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물류센터 구축, 기업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장내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등을 제시함

- 농생명업의 비중이 큰 전라북도의 장점을 살린 공약으로 판단됨.

- 그러나 연도별 추진계획이 명확하지 확인되지 않아 실제로 추진이 가능한지 판단이 되지 않으며, 향후 연도별로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평가가 어려울 것 같음. 또한 공약 이행을 위해 2,51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중 국비가 1,899억 원이어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재정확충을 위한 전략이 보이지 않음. 각 세부항목별로 필요한 예산이 확인되지 않아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 우려됨.

- 매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원 마련이 확실치 않다면 일만 벌이는 형국이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도 부족해 세부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임.

2) 개혁성 평가

- 지난 민선 6기 때 삼각농정을 추구하면 많은 정책을 추진했으나 일정 정도의 거

버너스를 형성한 성과는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함.

-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을 통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테스트 인프라 활용으로 농기계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첨단 ICT 융복합 농업경영체 운영할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 개별 기업의 원재료 저장시설 구축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식품기업의 비용 절감 및 품질경쟁력 강화, 국내 종자가공처리 역량 및 종자산업체 경쟁력 확보, 아시아 최초 장 건강 선도 중심지역으로 육성하여 1,000억 원 규모의 신시장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농가소득이나 도민들의 정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기업적 가치의 농업을 추구하고 있으나, ‘조속가능한 농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 귀농하는 젊은이들이 많기는 하나 아직은 농사일은 노인들의 몫인데 과연 지능형 농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농식품인력개발원 현장실습농장(WPL) 활용 관련하여 매년 100명씩(총 500명)씩 인력양성은 매달 8.3명꼴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필요함. 또한 기계 개발이나 센터 구축에 대한 계획만 있고 이와 관련된 인력개발이나 채용 등의 계획은 확인되지 않음.

3) 적실성 평가

- 식량 생산과 유통 과정의 첨단기술 접목 등 경제논리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기업농을 육성하는 것과 일반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균형도 필요함.
- 기대하는 효과가 와 닿지 않음.

제2핵심공약 : 전북산하 1000리길 조성

- 전북산하 1000리길 선정 : 해안길, 강변길, 산들길, 호수길
- 1000리길 스토리텔링 및 마케팅
- 전북산하 1000리길 걷기 붐 조성
- 1000리길 나무심기

1) 구체성 평가

-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지역발전 비전으로 제시함. 아름다운 전북 산하를 알리고 함께 공유하는 것은 좋지만, 개발 위주의 내용만 있고 환경 보전에 대한 대책은 확인되지 않음.
- 1000리길 조성으로 인근지역에 미칠 개발압력 등 자연생태환경 훼손에 대한 영향 평가 주변부 관리방안 등 종합적 검토가 제시되어야 함.
- 지방자치 단체에 축제가 난립하고 있는데 새로운 축제에 대한 계획은 참신하지 않음.
- 재원마련도 세부적인 대책과 배분계획이 확인되지 않아 공약의 실효성 의문됨.

2) 개혁성 평가

- 생태환경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나 단순히 길조성 계획만 제시하여 가로 조성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경관 훼손 주변부 난개발에 대한 대책은 보완되어야 함. 개발위주 사업은 많은 후유증을 남기는 바, 신중한 실행계획 필요하고 그 어떤 개발 사업보다 환경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먼저 필요함,
- 해당 아이টে은 제주도를 비롯한 지리산에도(둘레길) 이미 조성되어 있는 바, 관광객 유치에 대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소득 증대를 가져다 줄 지도 의문임.

3) 적실성 평가

- 길 마런 사업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어 동일한 사업의 반복으로 느껴짐. 여타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가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보완돼야 할 것임
- 해당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보다 환경 파괴, 원주민들과의 마찰, 쓰레기 발생 등의 부작용 우려됨

제3핵심공약 : 4차 산업혁명 대응 빅3 대표사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생명 빅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15억원) - 전라북도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 구축(140억원) - 탄소산업연계 3D 프린팅 산업육성(78억원)

1) 구체성 평가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 혁신성장동력 정책을 마련하고, 지능화 인프라, 스마트 이동체, 융합서비스, 산업기반 분야 등 분야별 맞춤형성장전략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정부의 4차산업혁명대응과 연계하고자 하는 공약임.
- 전라북도의 강점인 농생명, 금융, 탄소산업 등과 연계한 4차산업혁명 대응 대표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국가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선정 실패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음. 도민들에게 필요한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해야 함에도 추진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공약을 제시한 것은 문제임.
- 전체 사업예산으로 233억원(국비 187, 지방비 46)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나, 예산규모의 근거나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 전혀 찾아볼 수 없음.

2) 개혁성 평가

- 전북의 특성에 맞는 농생명 분야와 연계한 것은 긍정적이나, 정부추진사업으로 공모사업선정 대비 및 선정이후 사업추진하겠다는 것은 정책수립의 당위성도 세밀함도 부족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통한 도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전략적 사고도 부족함.
- 기대하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어떤 사업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임. 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전략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임.

3) 적실성 평가

-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춰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공약은 설령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클 수 있음.
- 4차 산업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대부분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므로 접목하겠다는 항상 똑같은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접목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내용 확인이 필요함.
-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더욱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계획 필요함.

■ 권태홍(정의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새만금 신구상으로 전북경제 회생

- 지역주민 주체적 참여 민관거버넌스 '새만금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 새만금을 세계 최대 태양광·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메카로!
-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산업단지 구축으로 새만금 스마트시티 건설
- 부분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수산업복원, 저수지설치로 농업생산, 전북청년 창농·스마트팜 마을 조성, 평화무역으로 흑연 내화물·소재가공 시범단지 설치

1) 구체성 평가

- 새만금간척사업 착공에도 불구하고 지역경기 침체, 담수화에 따른 새만금호 오염문제 극복을 위해 종합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 친환경자동차산업, 스마트시티 건설 등 새로운 도시건설을 위한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전북도의 숙원인 새만금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 공약으로 판단됨. 단순히 개발에 머물지 않고 수질개선까지 고려한 친환경적인 공약으로 판단됨. 재원마련 및 예산 세부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됨.
- 지난 많은 새만금 관련 공약과 같이 공약에만 머무르지 않을지 우려됨.

2) 개혁성 평가

- 환경파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과 신산업 방안을 제시한 점은 개혁성 높음
- 새만금 개발은 과거 경험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도 차원에서만 밀어붙인다고 해결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와 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 가능한지 의문임.
- 새만금 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은 그나마 보상대상이 되나 해당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 피해(수질악화,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질병 증가 등)만 발생하고 보상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발전과 관련한 모든 주민들의 피해사태에 대한 대책 필요함.

3) 적실성 평가

- 이미 8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개 실무협의체 구성 등 민관거버넌스를 구성을 제안하고 있으나, 추진 사업 중단에 따른 갈등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여 공약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개발과 환경 보전을 적절히 배합한 것으로 판단됨. 새만금 개발은 도민의 염원으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이 필요함.

제2핵심공약 : 공공 건강복지 허브 구축

- 공공의료-돌봄-복지 허브 구축
- 모든 읍면동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 임산부·영유아 방문간호 실시
- 아동 주치의제 도입
- 어르신 방문간호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1) 구체성 평가

- 공공 보건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세부공약들도 매우 구체적이며 관련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공공의료대학의 정원규모 확대, 부속병원 설립 등 종합적인 교육을 위해서 확대 추진되어야 함. 하지만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이므로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함. 공공의료-돌봄-복지허브 구축은 새로운 시설의 확대 없이, 기존의 의료시설 개선과 용역 연구 발주, 민관위원회 구성 등 실행계획은 다소 부족함.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하는 의료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이며, 중앙에 사업에 건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함.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임산부·영유아 방문간호 실시, 아동 주치의제 도입 등의 공약에는 실행계획이 부족함.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모호함. 무엇보다, 아동주치의제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병원 및 의료인이 얼마나 있을지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2) 개혁성 평가

-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 후보자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 있음. 지자체에서 이를 견인하려는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대부분 정부에 의존하는 사업으로 개혁성은 부족함.
- 전북지역은 공공의료 기관이 확충 되어야 하는데, 기존 의료 기관의 시설개선 등

지원강화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개혁성이 부족하고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움.

- 생활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은 노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전북도의 현실에서 만성질환 관리만 잘 이루어져도 지역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적실성 평가

- 고령화 정도가 높고 의료가 낙후된 곳에서 공공의료를 강조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시의적절함. 아동주치의제도 역시 저출산 시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면단위 소재지만 가도 의료기관이 부족해 장시간 차량을 이용하여 원거리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바, 의료서비스가 낙후된 전북도의 지역현안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공공의료기관의 신설 및 개원이 필요함에도 기존 의료기관을 지원 정책에 머물고 있음. 지원 정책만으로는 의료 서비스가 낙후된 지역의 상황에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제3핵심공약 : 도민주도성장 : 14개 시군 균형발전과 마을자치경제
--

- | |
|--------------|
| ○ 구체적 내용 없음. |
|--------------|

1) 구체성 평가

- 전북지역의 농업소득의 증가는 4년간 8만원 내외로 크지 않지만, 농가부채는 4년 전 보다 480만원 증가하는 등 농민들의 어려움을 제시하나,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은 제시하지 않음.
-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정책으로 신도심과 원도심간 균형발전이 요구된다는 입장이

지만 구체적 추진전략은 제시하지 않음.

2) 개혁성 평가

- 농가소득 정체와 농가부채 증가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새만금 사업에 따른 어패류의 산란처와 서식처 등 감소로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려움, 지역경제규모 격차(표준편차)의 확대에 따른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진단은 있으나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개혁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

3) 적실성 평가

- 전북의 14개 시군별로 지역유형이 다른 데 획일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지역경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인식은 있으나,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음.